

<아프리카경제연구회 발표자료>

우리나라의 對아프리카 경제협력 방안 -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

2005.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 영 호

I. 서론

- 아프리카대륙에 새로운 변화의 흐름이 형성되면서 더 이상 과거의 “구제불능 대륙”이 아닌 새로운 성장가능지대로 인식되어 가고 있음.
- 이러한 변화의 근저에는 정치적 안정과 함께 경제발전 가능성, 개혁·개방화, 시장통합, 무역·투자 등 대외경제관계 확대 등이 자리 잡고 있음.
- 더욱이 아프리카대륙의 글로벌 경제체제로의 편입 의지가 가시화되면서 국제사회도 이러한 노력을 적극 지지하는 한편 아프리카를 기존의 단순한 원조대상국이 아닌 새로운 경제협력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이러한 견지에서 아프리카는 새로운 기회의 시장 또는 협력파트너로 재조명되어야 하며 이에 비례하여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도 커져야 할 것임.
- 그 동안 우리나라의 대 아프리카 경제협력은 주로 민간부문에 맡겨져 왔음.
- 그러나 중국, 일본, 미국 등 경쟁국들의 대 아프리카 진출기반 조성 과정에서 보듯이 자원외교, 개발원조, 독자적 협력프로그램 등과 같은 정부지원하의 협력이 주효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우리정부도 주도적 노력과 함께 다양한 협력정책수단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음.
- 이러한 배경과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아프리카국가별로 협력가능 분야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정부의 역할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II. 분야별 협력중점국가 선정

- 53개국에 이르는 방대하고도 사실상 미개척지라 할 수 있는 아프리카지역과의 효율적인 협력방안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구, 경제규모, 경제상황, 부존자원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아프리카지역을 특성별로 세분화하여 각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협력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여기서는 아프리카 각국이 지니고 있는 경제적 특성을 감안하여, 우리가 일차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중점협력대상국을 선정해 보고 국가별로 그 특성을 개괄해 보고자 함.

<표-1> 분야별 협력중점 국가

분야	대상국	비고
교역(5개국)	- 남아공(20%) - 이집트(12%) - 모로코(8%) - 나이지리아(8%) - 알제리(7%)	- 5개국은 아프리카 경제대국으로 아프리카 전체 수입시장의 절반 이상 차지 - 중점 또는 거점국가로 관리
석유에너지(5개국)	- 리비아 - 알제리 - 나이지리아 - 앙골라 - 적도기니	- 서아프리카 기니아 만을 중심으로 원유개발 잠재력 가시화 - 새로운 원유공급센터로 부상 전망 -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2004.4)를 계기로 원유개발 재개(리비아)
플랜트 건설(3개국)	- 리비아 - 알제리 - 나이지리아	- 고유가 지속에 따른 오일 머니 획득으로 플랜트 발주 확대 - 경제성장에 따른 SOC, 석유·가스전 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
FTA	- 남아공	- 신흥경제국으로 아프리카 최대 경제대국 - 아프리카 교역의 1/4 차지 - 아프리카 역내통합 주도

1. 교역: 남아공·이집트·나이지리아·케냐·알제리·모로코

□ 권역별로 집중적인 시장개척 노력을 기울여야 할 중점시장을 선정,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단계적으로 시장영역을 인근국가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함.

- 즉, 중점국가 자체시장과 함께 주변국 시장진출을 위한 거점화가 필요하며 이를 감안한 협력대상국가 선정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시장규모 및 시장잠재력, 경제발전 및 한국과의 경제관계, 시장의 전략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남부지역의 남아공, 중동부지역의 케냐, 서부지역의 나이지리아, 북부지역의 이집트, 알제리, 모로코 등 6개국을 전략적으로 거점화할 필요가 있는 협력대상국으로 선정하고자 함.

- 이들 경제국들의 아프리카내 경제적 위상은 수입시장 규모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 아프리카 전체수입시장의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이들 국가들은 해당권역내에서 물류 및 경제적 중심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동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동부아프리카협력체(EAC) 등 지역통합체를 사실상 주도해 나가고 있어 자체시장은 물론 인근지역으로의 진출거점 또는 지역본부로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높은 시장임.

① 남아공

□ 아프리카 최대의 경제부국 남아공은 자체시장성은 물론 사하라이남 지역의 경제적 중심지 및 핵심적 물류유통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남아공은 또한 SADC 등과 같은 역내 경제통합을 사실상 주도해 나가고 있으며 역내간 교역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등 아프리카 시장진출의 거점기지로도 활용가치도 높음.

□ 남아공은 아프리카대륙 경제규모의 30%, 수입시장의 1/4를 차지할 정도로 아프리카 최대의 경제부국이자 아프리카제국 가운데 성장잠재력이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는 거대신흥시장임.

- 유럽 및 미국 등 선진국 상품이 사실상 남아공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신규 시장진입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이나 일단 시장진출에 성공할 경우에는 일정한 시장점유율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② 이집트

□ 북부아프리카 최대 경제대국인 이집트는 거대한 내수시장을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역내경제협력을 주도해 나가고 있어 아프리카시장에 대한 수출거점기지로 활용할 가치가 높음.

- 900억 달러 정도의 경제규모(GDP)로 남아공에 이어 아프리카 제2위의 경제력을 지니고 있으며 시장구매력(1인당 GDP: 11,400억 달러)에서도 아프리카 전체평균(677달러)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

- 인구규모면에서도 나이지리아(1억 2,400만명)에 이어 아프리카 제2위의 인구대국으로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 이집트의 수입시장 규모는 무역자유화 진전에 따른 관세인하와 수입금지 품목의 축소에 따른 수입수요 증대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 국내 제조업기반의 부재로 주종 수출품이 원유 및 관련제품, 원면 등 일차산품에 국한되고, 대부분의 생필품과 기계류, 운송장비, 화학·피혁제품 등 대부분의 공산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이집트는 한국기업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및 부품, 전자제품 및 부품, 섬유 및 기계류 등 공산품의 수입시장 규모가 크고, 높은 수입신장률을 보이고 있어 한국기업의 수출확대 여지가 큰 유망신흥시장임.

- 더욱이 한국산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에 대한 현지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아 공격적인 마케팅전략을 구사할 경우 수출확대의 가능성이 높은 대형시장임.

③ 나이지리아

□ 아프리카대륙의 최대 인구대국(1억 1,000만)으로 경제규모면에서도 남아공에 이어 제2위의 경제력을 지니고 있는 나이지리아는 내수시장은 물론 인근 서부아프리카 시장진출을 위한 전략적 거점시장으로 활용할 가치가 높음.

-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은 4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빈국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1999년 5월 민선정부 출범 이후 개혁·개방화가 꾸준히 추진되고 있어 성장잠재력이 기대되고 있는 시장임.

□ 정치적 불안과 종족 및 종교 분쟁, 만연한 부정부패, 비효율적인 경제정책 운용 등으로 최빈국의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으나, 개혁·개방화와 함께 막대한 석유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성장잠재력이 높게 평가되고 있음.

- 또한 방대한 인구규모와 개발정책 추진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시장개척 및 협력 노력여하에 따라 대량수출이 기대되는 시장이라 할 수 있음.

④ 케냐

□ 케냐는 동부아프리카국가 중 가장 선진화된 경제구조와 상대적으로 큰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최근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우간다와 탄자니아 등 인근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거점지역으로서도 중요한 시장임.

- 또한, 주변 동부아프리카 제국과는 달리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일찍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케냐는 동부아프리카 중심국으로 동부아프리카지역공동체(EAC: East Africa Community)에서 주도적 역할

을 담당하고 있고, EU와는 로메협정을 통해特惠무역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EU시장은 물론 동부아프리카 진출거점으로서 활용여지가 높음.

□ 이러한 이유로 영국 등 유럽국가들은 물론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경쟁국들이 정책적 원조제공과 함께 정치, 경제, 사회적 유대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케냐를 전진기지로 하여 인근 동부아프리카 시장진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또한 케냐는 도로·항만(몸바사)·철도 등 인프라시설이 탄자니아, 우간다 등 인근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어 동부아프리카 지역의 관문이자, 진출거점지역으로서 중요성이 있는 시장임.

- 한국 상품의 케냐 시장점유율은 현재 1~2%대에 머물고 있으나 시장 개척 노력을 강화할 경우 시장 확대의 여지가 충분한 시장이라 할 수 있음.

⑤ 모로코·알제리

□ 모로코와 알제리는 북부 아프리카지역에서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신흥시장으로 평가되고 있음.

- 마그레브지역(3개국)은 인구 6,800만, GDP 1,000억 달러, 수입시장 규모 270억 달러 등으로 결코 무시하지 못할 시장규모를 지니고 있음.

□ 모로코는 아프리카대륙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정치·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는 신흥시장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연간 수입규모는 100억 달러 수준으로 남아공, 이집트, 나이지리아에 이어 네 번째로 큰 수입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 부존자원이 없어 1인당 국민소득이 1,300달러 선에 머물고 있지만 2,800만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소비시장으로서 지속적인 경제성장 과 개혁·개방화로 수입수요 확대가 예상되고 있는 잠재적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음.

- 원유를 비롯하여 자동차, 화학제품, 밀, 설탕 등이 수입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저가 경공업제품은 중국 등 후발개도국에서, 그리고 자동차 및 자본재는 유럽과 일본에서 주로 수입되고 있음.

□ 모로코정부는 수입관세를 인하 등을 통해 정보통신 육성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로코를 중동·아프리카진출의 허브(hub)로 활용하기 위한 외국통신업체들의 진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휴대폰 등 정보통신 제품 및 통신장비는 물론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들 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수출전략이 필요함.

□ 또한, 모로코는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유럽지역과 특별한 역사적·지리적 관계에 기초하여 특혜관세협정 등 밀접한 경제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어 EU시장 접근을 위한 우회기지로써도 전략적 가치가 있음.

- 모로코와 EU간 정치·경제 등 제반분야에서의 상호협력 및 동반적 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협력협정(Association Agreement)이 2000년 2월 EU의 비준절차를 거쳐 2000년 3월 1일부로 공식 발효되었음.

- 이에 따라 공산품의 단계적 관세인하 과정을 거쳐 2012년에는 양 지역간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는 곧 EU시장체제로의 편입을 의미하는 것임.

□ 알제리는 남아공, 이집트에 이어 아프리카 3대 경제대국으로, 시장규모(GDP)와 인구규모(3,000만)면에서 마그레브지역 가운데 가장 큰 내수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 석유자원에 지나치게 편중된 산업구조, 제조업 및 서비스부문의 낙후성, 이슬람 과격단체의 테러에 의한 사회폭력사태와 정치적 불

안, 부정부패 등이 경제발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나, 원유 및 천연가스 등 광대한 석유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저 소득수준의 신흥유망시장으로 분류되고 있음.

□ WTO 미가입국인 알제리는 아직 시장경제체제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체제전환국이나, 지속적인 공업화정책 추진 등을 감안할 때 수출유망 대상시장으로 평가되고 있음.

- 알제리는 원유 및 가스수출이라는 안정적인 외환수입원을 바탕으로 식품, 원자재, 기계류 등 소비재 및 생산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2. 석유개발

가. 서아프리카: 나이지리아·앙골라·적도기니

□ 서아프리카의 기네아만은 여타 산유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미개척지라고 할 수 있음.

- 실제로 기네아만은 가스피해와 더불어 세계 오일메이저들이 새롭게 주목하고 있는 유망 신흥지역으로 근래 들어 다수의 경제성 있는 유전들이 잇달아 발견되고 있음.

- 많은 에너지 전문기관은 북해와 멕시코만 유전지역은 이미 성숙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세계에서 가장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기네아만을 꼽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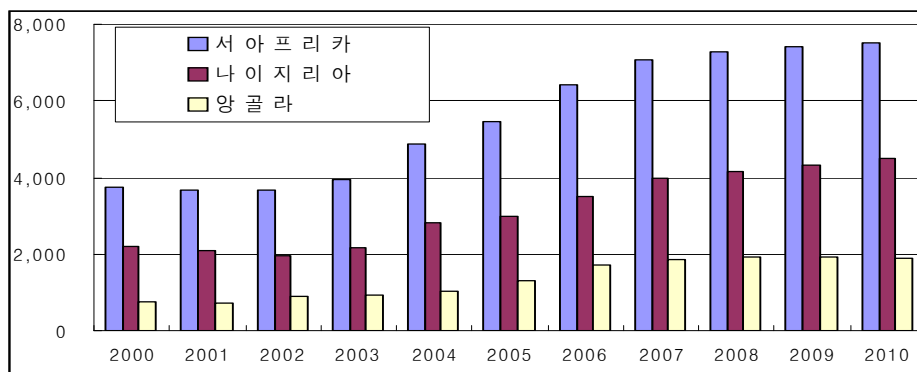
- 또한 오일메이저들의 심해유전 개발투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이 이 지역으로 몰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미국의 에너지정보청(EIA) 역시 서아프리카의 개발 잠재력이 가스피해나 남미보다도 높다고 평가하고 2030년경에는 생산량이 900만

b/d를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그림-1>은 서아프리카의 최근 원유생산 현황과 2010년까지의 생산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2008년경 서아프리카의 원유생산은 나이지리아, 앙골라, 차드, 적도기니의 개발사업 확대로 700만~800만 b/d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특히, 심해 유전개발이 본격화에 오르면서 나이지리아와 앙골라의 생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나이지리아는 200만 b/d에서 420만 b/d, 그리고 앙골라는 88만 b/d에서 200만 b/d로 각각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지역의 유전개발은 주로 육상과 천해 지역에 집중되었으나 이후 이들 유전이 성숙단계에 접어들자 최근 들어서는 심해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그림-1> 서아프리카 원유생산 전망(단위: 천 b/d)



자료: *West Africa Oil and Gas Sourcebook*, 2004.

- 국가별로 보면 역시 나이지리아와 앙골라가 앞으로도 이 지역의 개발 사업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나이지리아는 OPEC 회원국이자 세계 10대 석유수출국으로서 국제 에너지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품질 또한 고질의 저유황 원유로도 정평이 나 있음.
- 현재까지 확인된 매장량은 350억 배럴로 대부분이 해안지역인 니제

르 삼각주(Niger Delta) 분지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산유량은 쿠웨이트나 UAE와 비슷한 250만 배럴에 달하고 있음.

- 최근 들어 심해유전에 대한 메이저들의 개발사업 확대로 대규모의 유전이 잇달아 발견되고 있는데 2007년경부터는 산유량이 400만 b/d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나이지리아에 이어 서아프리카 제2의 산유국인 앙골라는 비OPEC 회원국 가운데 개발사업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인데 1990년대 동안에만 확인 매장량이 4배 이상 증가하여 현재 70억 배럴에 이르고 있다. 내전에도 불구하고 1980년 이후 산유량이 6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해상유전개발로 산유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현재 생산량은 100만 b/d에 달하고 있으며 2010년경에는 오일메이저들의 심해유전 개발사업 확대로 생산량이 200만 b/d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전형적인 농업소국에 불과했던 적도기니는 1997년 산유가 개시된 이후 급성장한 석유산업이 현재 국내총생산과 수출의 60%와 90%를 담당하는 산유국으로 변신하였음.

- 현재까지 산유량은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나 최근 국제 오일메이저들의 개발사업으로 신규유전이 잇달아 발견되고 있어 산유국 대열에 본격 합류하고 있음.

- 생산추이를 보면 현재 20만 b/d 정도로 1990년대 중반에 비해 10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2005년경에는 30만 b/d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러한 적도기니의 개발 잠재력과 기니아만에서의 전략적 가치가 평가되면서 미국메이저들의 사업진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는데, 현재 적도기니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가운데 남아공, 나이지리아, 앙골라에 이어 미국의 4대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하였음.

- 이외에도 주요 산유국으로는 콩고, 카메룬, 가봉, 수단 등을 들 수 있으나 이들 국가들은 근래 들어 인근 산유국들과는 달리 신규 유전개발사업의 부진으로 1980년대의 오일 붐으로부터 점차 멀어지고 있음.

<표-2> 서아프리카 산유국별 주요 특징

나이지리아	· OPEC 회원국이자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 · 생산량은 200만 배럴로 쿠웨이트와 UAE와 비슷한 수준. · 니제르 삼각주(Niger Delta)에서 주로 생산. · 심해지역에서의 활발한 탐사활동으로 대규모 유전발견에 성공. · 원유의 40%는 해상유전에서 생산. · 전형적인 고품질의 경질 저유황으로 대부분 수출(최대 수출선은 미국) · 석유를 둘러싼 종족간 유혈분쟁으로 석유생산에 많은 차질 발생
앙골라	· 아프리카(사하라이남) 제2위 산유국. · 비OPEC 회원국 가운데 가장 활발한 원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1990년대 동안 확인 매장량이 4배 이상 증가하여 현재 70억 배럴에 달함. · 내전 중에도 불구하고 원유생산은 1980년 이후 6배 이상 증가, 현재 90만 배럴에 이르고 있음. · 2010년경에는 심해유전개발사업 확대로 200만 배럴 생산전망. · Cabinda 유전에서는 앙골라 원유총생산의 70% 이상이 생산되고 있는데, 분리주의 단체들의 원유 요구사례 등 지역불안이 상존하고 있음.
적도기니	· 1990년대 중반 이후 농업국에서 산유국으로 부상. · 미국을 비롯한 오일메이저들의 활발한 사업진출. · 1990년대 중반 석유생산이 개시되어 현재 20만 배럴에 이르고 있으며, 2005년경에는 30만 배럴 전망. · 인접국간 해상유전을 둘러싼 국경문제가 원유개발의 걸림돌로 작용.
카메룬	· 매장량은 4억 배럴로 나이지리아 니제르 델타지역과 인접한 해상지역과 카메룬 북부지역의 육상유전에 주로 분포. · 1980년대 중반에는 17~18만 배럴까지 산유량이 늘어났으나, 198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신규유전개발이 부진한 상황에서 기존유전마저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음.
차드	· 내전 등으로 인해 추진되지 못했던 석유개발사업이 최근 들어 활기를 띄고 있으며 2005년경부터는 생산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2003년 7월에는 Doba유전에서 차드 역사상 처음으로 원유가 생산되었으며, 카메룬을 연결하는 전장 1,000km의 송유관을 통해 수출이 개시되었음. · 세계은행과 ExxonMobil 등의 다국적 오일메이저들에 의해 건설된 석유개발프로젝트가 완전 가동될 경우 생산량이 25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전망.
콩고	· 나이지리아, 앙골라, 가봉에 이어 4번째의 아프리카 산유국임. · 매장량은 15억 배럴로 대부분 해상에 매장되어 있음. · 1994년부터 합작투자방식(J/V)에서 생산물분배방식(PSC)으로 전환하였음. · 프랑스 다국적 오일메이저(TotalFinaElf)가 전체 산유량의 40%를 차지하며 사실상 독점. · 2000년까지 산유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28만 배럴에 달했으나, 이후 정체 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현재로서는 신규유전개발 가능성이 낮아 전체적인 감소세가 예상됨.

가봉	· 인근 산유국과는 달리 신규유전개발의 지연으로 산유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2006년경에는 1990년대 후반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 · 현재 TotalFinaElf와 Shell이 원유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

자료: 저자 작성

나. 북아프리카: 리비아·알제리

① 리비아

□ 아프리카 최대의 원유부국인 리비아의 원유 확인매장량은 390억 배럴에 달하고 있으며 10억 배럴 이상에 달하는 초대형 유전만 해도 12개가 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

- 더욱이 국토의 70% 정도가 아직 미개발 지역으로 남아 있어 이를 감안할 경우 실제 원유매장량은 엄청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그 동안 미국의 경제제재(ILSA법)로 인해 잠재적 생산능력에 비해 실제생산량이 대단히 저조한 실정이었으나 2004년 4월 경제제재 해제 이후 미국 오일메이저들의 진출재개와 리비아정부의 석유개발 의지가 결부되면서 생산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에너지전문가들은 미국의 자본과 기술이 본격적으로 유입될 경우 현재 1970년대 초반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진 산유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머지않아 1970년대의 절정기 수준으로까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리비아 정부는 외자유치를 통해 현재 140만 b/d 정도에 불과한 원유 생산능력을 2010년까지 300만 b/d 수준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임.
- 이 같은 목표치는 다소 무리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경제제재 해제 이후 유럽과 미국 등 서방국은 물론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석유기업들

까지도 리비아진출에 경쟁적으로 가세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임.

- 더욱이 대부분의 유전이 육상에 위치해 있어 생산비용이 저렴(배럴 당 채굴단가가 대략 2~5 달러선이며 일부유전의 경우 1 달러 정도에 불과)하고 유럽시장과 인접해 있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어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에너지전문기관(Robertson Research)에 따르면 리비아가 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그리고 중동지역에서는 개발전망이 가장 밝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② 알제리

- 아프리카 최대의 국토면적을 지니고 있는 알제리 역시 막대한 석유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산유국으로 개발 잠재력이 높게 평가되고 있음.
- 현재까지 확인된 매장량은 118억 배럴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는 아프리카 전체 매장량의 약 12%에 해당하는 규모임.
- OPEC 회원국인 알제리는 기본적으로 생산쿼터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현재 180만 b/d 미만인 생산량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목표로 외국기업 유치를 통해 유전시설 확충은 물론 원유개발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알제리산 원유 역시 저유황 성분의 경질유로 품질이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또한 원유생산은 정치적으로 안정된 사하라 사막 중앙지역 및 리비아와의 국경지대와 같은 육상유전지대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이슬람 과격단체의 테러에 의한 사회폭력 사태와 정치적 불안은 여전히 투자심리와 개발사업 활동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3. 플랜트 건설: 리비아·알제리

① 리비아

- 리비아는 오랫동안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조치로 인해 일부 국책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프로젝트추진에 있어 많은 차질을 빚었으나 국제유가 상승기조와 경제제재 중단조치로 석유 및 가스 등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그 동안 미진했던 대규모 개발투자가 활발히 재개되고 있음.
- 또한 리비아정부는 대수로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그 동안 재원부족으로 중단되었던 석유화학, 전력, 중소형 설비플랜트 등의 프로젝트추진을 계획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한국건설업체의 지속적인 시장진출이 기대되고 있음.
- 단순 토목건설공사의 경우, 중국 및 인도 등 후발업체의 진출강화로 입지가 점차 약화되고 있어, 대수로 공사 등을 비롯한 각종 건설공사에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분야인 플랜트 부문으로의 진출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 리비아정부는 2020년까지 국민소득을 배증한다는 목표로 1,200억 달러를 투입하는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어 에너지개발은 물론 도로·항만·공항 등 기초 인프라와 전력·통신 등 기간산업 건설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더욱이 그 동안 석유산업 개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해 왔던 미국의 “ILSA 법”도 해제되어 석유개발 등 에너지부문을 중심으로 한 플랜트 건설수요의 빠른 확대가 예상되고 있음.
- 또한 리비아는 경제제재 기간 중에는 외화획득이 급선무였던 관계로 원유개발 등 주로 상류부문(Upstream)에만 치중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하류부문(Downstream)이 크게 낙후되었으나, 정유시설 및 석유화학공장 확충 등 하류부문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외국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음.

- 새로운 가스개발법 제정을 서두르는 등 미개발상태로 남아 있는 가스전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음.
- 생산, 처리 및 수송시설 확충에 투자우선순위를 두고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에 주력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세계 석유메이저와의 합작으로 대형 신규 가스전을 개발하고 있음.
- 특히, 54억 달러의 대규모 공사인 서부사막(West Libya Desert) 가스파이프라인 프로젝트는 대수로 후속공사(3·4단계), 북아프리카 철도망 건설사업과 함께 향후 10년간 리비아 건설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보임.

② 알제리

- 알제리는 이집트와 남아공에 이어 아프리카 3대 건설대국으로 에너지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정치적 불안이 해소될 경우 석유·가스 등 플랜트부문을 중심으로 한 시장진출이 가시화될 수 있는 유망시장임.
- 알제리는 아직 시장경제체제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체제전환국이나 지속적인 공업화정책 추진 등을 감안할 때 인프라부문에 대한 건설수요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알제리는 고유가 지속에 따른 석유수입 증대로 에너지분야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 진출유망분야로는 석유 및 가스전개발에 따른 에너지기반시설, 파이프라인 건설, 화학플랜트, 전력프로젝트 등을 들 수 있음.
- 원유개발프로젝트는 대형 국책사업으로서 대부분 석유메이저와 국영에너지공사간 합작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다수의 프로젝트 추진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음.

- 또한 알제리는 아프리카 최대의 가스생산국이자 세계 제2위의 가스 수출국으로서 가스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출확대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신규 가스처리시설 및 파이프라인 건설이 유망함.
- 대부분의 가스개발은 선진업체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요구되는 민자사업으로 현재 다수의 가스프로젝트가 계획 또는 개발단계에 있음.
- 인프라분야는 에너지산업에 비해 사업여력이 미약한 편이지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는 주택건설, 고속도로 건설 등을 들 수 있음.

Ⅲ. 분야별 경제협력 방안

1. 통상협력

가. 남아공과의 경제협력 틀 조기구축: 한-남아공 FTA 추진

① 한-남아공 FTA의 타당성

- 한국과 아프리카간의 실질적인 경제적 협력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국과 남아공간의 FTA 체결이 요망됨.
- 남아공을 아프리카 여러 국가 가운데 1개국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핵심국’으로 떼어서 중요성을 부여하고 접근해 나가야함.
- 아프리카내 남아공의 위상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남아공과의 관계를 격상시켜갈 수 있는 메카니즘 개발이 필요한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FTA라고 할 수 있음.
- 한-남아공 FTA는 한국과 남아공간의 경제자유화를 쌍방이 약속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시장으로의 진출을 가능케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임.

- 우리의 대 아프리카 수출 교두보이자 내수시장으로도 주력시장인 남아공과의 FTA는 촉각을 다룰 만큼 급박한 이슈라고 사료됨.

□ 남아공은 아프리카 전체 경제규모의 30%, 그것도 사하라이남지역을 기준으로 하면 무려 절반 가까이에 달함.

-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전체 교역의 1/4를 차지할 정도로 아프리카 최대의 경제대국인 동시에 아프리카대륙에서 성장잠재력이 가장 높은 유망신흥시장으로 평가되고 있음.

- 미 상무성은 이미 지난 1994년 세계 10대 거대 신흥시장국(BEMs)에 남아공을 포함시킨 바 있음.

□ 남아공은 전형적인 원자재 수출국가인 반면에, 한국은 원자재 수입 및 공산품 수출국으로서 양국은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어, 그 만큼 FTA 체결에 따른 상호 경제협력의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음.

- 즉, 남아공과 우리의 교역은 우리가 공산품을 수출하고 일차산품을 수입하는 남북교역의 형태를 강하게 띠고 있어, FTA 체결에 따른 한국의 공산품 수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남아공은 제조업 발전단계가 낮아 전반적으로 우리와 경합관계에 놓일 만한 상품은 없음.

- 다만, 남아공은 다른 신흥경제국에 비해 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협소하고, 유럽 등 선진국의 광범위한 시장지배로 단기적으로 높은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는 없음.

- 그러나 비록 남아공과의 FTA가 단기적으로는 그다지 높은 경제적 이익을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FTA의 가장 커다란 의의는 남아공시장을

기반으로 아프리카시장에 진출을 확대하는 것임.

- 한-남아공 FTA 체결이 양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양국간 FTA의 보다 큰 기능과 역할은 남아공과 경제통합체를 형성하고 있는 인근국가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대륙까지도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수단으로 중요한 가치를 부여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아울러, 남아공 진출강화는 유럽은 물론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우회 생산기지로서도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미국은 남아공에 대해 소위 AGOA(아프리카 성장 및 기회법)라는 무역특혜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남아공의 대미 수출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AGOA은 일종의 미국의 개발지원정책으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해 섬유 등 일정품목에 대해 무관세, 무쿼터 등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남아공은 아시아 신흥경제국들에 비해 시장은 협소하지만 아프리카 전진기지로서 적합한 FTA 대상국임.

- 거대 경제권과의 FTA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뿐 만 아니라 그 과정도 간단치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역 및 투자 면에서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우리산업과 상호 보완성, 지역거점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소규모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음.
- FTA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대상국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기준은 상대국의 무역 및 투자에서의 시장규모, 국내산업과 상대국 산업간의 상호보완성 정도, 상대국의 정치적 안정성 및 경제적인 관점에서 지역거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 여부, 우리나라와의 지역협정 체결의사, 기타 정치, 사회적 변수 등을 들 수 있음.

<표-3> FTA 대상국으로서의 남아공

FTA 대상국 선정기준	주요 특징
시장규모(무역 및 투자시장)	- 아프리카 최대 경제규모 - 신흥경제국으로 분류 - 아프리카 전체 교역의 1/4 차지 - 한국의 수출: 2004년 경우 10억불 기록
산업간 상호보완성	- 매우 높음(원자재 수입/공산품 수출) - 수직적(vertical) FTA
정치적 안정성	- 높음 - 치안문제는 여전히 상존
거점지역으로의 활용	- 가장 높음 - 역내 경제통합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으며 교역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지역협정 체결의지	-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단계임 - 공동연구의 필요성 언급 - 상호이해 과정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음(SACU와의 문제 등)

한-남아공 FTA 논의동향

- 1990년대 중반 당시 남아공은 칠레, 이스라엘과 함께 우리나라의 유력한 FTA 대상국이었음.
 - 남아공은 FTA 실익이 크고 거점지역 활용 가능성이 높이 평가되었으나, 남아공측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음.
- 금년(2005) 6월 개최된 한-남아공 정책협의회에서 우리정부(외교부)가 먼저 FTA 추진 가능성을 타진함.
- 우리측 제안에 대해 남아공 정부는 양국간 FTA 타당성 조사를 담당할 연구기관을 지정하겠다고 답변.
 - 그러나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며 연구기관도 미지정.
- 남아공은 SACU(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라는 관세동맹체에 속해 있어 우리와의 FTA 체결대상은 남아공 1개국이 아닌 SACU(회원국: 남아공, 보츠와나, 나미비아, 스와질란드, 레소토)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 SACU 협정에 따라, FTA 체결은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나, 사실상 남아공이 SACU를 주도하고 있어 남아공이 결정하면 대부분 동의함.
- FTA 협정범위와 관련하여, 우리정부의 기본입장은 상품교역뿐만 아니라 서비스교역,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투자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FTA 체결의 필요성 언급.
- 이에 대해, 현재 미국과 추진하고 있는 FTA 협상을 예로 들면서, 한국과의 포괄적 FTA 체결에 다소 부정적 입장
- 또한 남아공과 한국 모두 서로의 경제구조 및 통상정책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FTA 추진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
- 결론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는 FTA 추진을 위한 양국의 분명한 입장(Road Map)은 없으며, 추진의지 또한 높지 않은 상황임.
- 그러나, 향후 추진가능성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모멘텀이 형성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

나. 통상인프라 구축

① 아프리카 공동 정보망 구축

- 21세기 들어 통신수단의 발달로 우리기업의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정보입수가 보다 용이해지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종합적인 자료의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현재 분산되어 있는 아프리카 관련 정보를 종합적이며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동 네트워크를 구성, 아프리카 시장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보다 손쉽게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요망됨.
- 또한 아프리카 진출기업들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아울러 구축할 필요가 있음.

② 아프리카 연구기능 강화

- 종합적인 정보체계 구축이 미진하다는 점에서, 현지 시장조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기존의 우리의 대 아프리카 수출상품 이외에 현지 소비자들로 하여금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시장조사는 기업의 몫이지만, 대 아프리카 수출주체들이 중소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와 공공기관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함.
- 아프리카에 대한 지역연구(area studies) 기능이 강화되어야 함.
- 일본의 아프리카 연구는 일찍부터 시작되어 그 연구 성과물이 상당히 축적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우리의 아프리카 연구는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
- KIEP는 국책 경제연구소로서 아프리카 지역연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바, 아프리카 연구촉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자부 등 정부관련 부처의 지속적인 연구용역 발주가 선행되어야 함.
- KOTRA 해외무역관에서 아프리카 관련정부를 입수하고 있으나, 기관 성격상 단편적인 시장정보에 국한된 것으로서 체계적이고도 심층적인 정보제공에는 그 한계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임.
-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시각, 그리고 무관심이 국내의 아프리카 연구 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나, 세계적으로 시장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개척 아프리카시장에 대한 시각교정이 필요한 시점임.

③ 제도적 투자인프라 구축

□ 우리기업의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임.

- 아직까지 한국과 아프리카간 투자관련 제도협력은 미흡한 수준임.

<표-4> 한국-아프리카 투자관련 협정체결 현황

투자보장협정 (6개국)	이중과세방지협정 (3개국)
알제리(2001), 모로코(2001), 나이지리아(1999), 남아공(1997), 이집트(1997), 세네갈(1985)	모로코(2000), 이집트(1994), 남아공(1996)

주: ()는 발효일 기준

자료: 외교통상부 조약국

- 현재 투자보장협정은 아프리카 53개국 중 6개 국가와만 체결된 상태임. 또한 현지 투자진출의 양대 제도적 기본요건인 이중과세방지협정은 모로코, 이집트, 남아공 등 3개 국가와만 체결되었음.

□ 따라서 향후 한국기업의 아프리카 투자진출 확대 및 안정적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협정의 체결을 통해 제도적 진출기반을 우선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자원협력

가. 자원협력협정

□ 아프리카 자원부국과 자원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자원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함.

- 자원협력의 제도기반은 먼저 아프리카 자원부국과 자원협력협정을 체결하는 것임.

- 자원협력 협정체결을 통해 협력의 실마리를 마련하고, 보다 세분화된 분야로 협력을 심화·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상술한 자원협력 협정으로 일차적 여건을 조성한 다음에는 보다 실질적인 협력을 논의할 채널로서 양자간 자원협력위원회를 설립할 필요가 있음.
- 우리 정부는 이미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자원외교기반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주요 자원보유국과 에너지 분야의 교역, 합작투자, 기술협력 및 정보 교환 등에 관한 협력증진을 위해 정부간 협의채널로서 자원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연례 정기회의 형태로 운영해오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와 자원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로는 인도네시아, 러시아, 호주, 베트남, 몽골, 중국, 카자흐스탄 등이 있는바, 이들 국가는 대체로 동아시아와 동북아에 편중되어 있음.
-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콩고(DRC)가 자원협력약정 및 자원협력위원회 대상국으로 선정되어 최근 MOU가 체결된 상태임.
- 또 다른 자원협력위원회 후보 대상국으로는 아프리카 자원강국인 남아공 등을 들 수 있음.

나. 석유외교의 강화

- 석유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도입선의 다변화와 석유자원을 직접 개발하여 들여오는 개발수입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프리카지역으로 개발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음.
- 우리 스스로 개발에 참여하여 도입하는 것이 원유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 것임.
- 현재 우리의 아프리카 석유개발사업은 대부분 소규모의 단순 지분참여에 머물고 있어 이 지역의 개발 잠재력에 비해 투자규모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아프리카지역에도 이미 세계 굴지의 오일메이저들이 대거 진출해 있으나 산유국 수가 많다 보니 틈새시장을 찾는다는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음.
- 아프리카는 지리적으로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과 유럽에 가까이 위치해 있어 우리 진출기업이 원유생산물을 현지에서 이들 시장에 판매할 경우 수송비 등 비용절감과 오일머니 확보에 유리할 수 있음.
- 석유수급 문제는 시장경제의 논리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임을 감안할 때, 우리도 아프리카를 석유시장 다변화를 위한 관심지역으로 인식하고 이에 걸 맞는 중장기적인 대책수립과 외교적 노력이 필요할 때임.
- 석유자원 확보를 위해 정상이 직접 나서 아프리카에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경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임.
- 석유개발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경우, 정상외교는 우리 기업의 자원개발 진출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일정부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프로젝트별로 치밀한 시장조사, 예비접촉을 통해 협력분위기를 충분히 조성한 후 적절한 정상외교 시기를 선택함.
- 「에너지산업 해외진출협의회」 중심의 세부 진출전략 수립 → 타당성 조사단 파견 → 민관 합동의 진출협상 착수 → 정상외교를 통한 수주 진행.
- 석유 외교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대상국으로도 역시 아프리카 석유대국인 나이지리아, 앙골라, 리비아, 알제리 그리고 최근 신흥 산유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적도기니를 들 수 있음.

3. 플랜트 건설

가. 프로젝트 정보망 구축

- 아프리카 건설시장은 일부국가를 제외하면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미개척지역으로 비교적 생소한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수주활동에 앞서 종합적인 시장조사 기능 및 프로젝트정보망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우리기업은 거의 진출포화 상태에 있는 중동지역이나 동남아시아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보가 밝은 편이지만, 아프리카시장에 관해서는 경제관계 역사가 일천하여 정보수집 체계가 빈약한 실정임.
- 모든 해외시장의 개척활동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할 때 성공가능성이 그 만큼 높다고 할 수 있겠으나 특히, 아프리카시장은 세계 어느 시장보다도 불확실성이 높고, 프로젝트발주의 불예측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어 적시의 정확한 정보입수채널 구축은 수주성공여부와 직결될 수 있음.
- 시장조사 활동은 현지시장의 건설제도나 관행 등과 같은 실질적인 정보에서부터 주요 프로젝트의 발주계획 및 발주처의 주요인사 파악 등에 이르기까지 수주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반정보의 수집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시장진출 준비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중요성을 띄고 있음.
- 대규모 건설수요는 무엇보다도 에너지관련 플랜트 프로젝트가 많이 발주되는 북아프리카 산유국들을 중심으로 확대될 것인 바, 이러한 잠재성을 감안하여 북아프리카 주요 진출거점지역에 프로젝트 발주 정보체계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건설주재관(플랜트 전문가) 파견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인맥사회 성격이 강한 아프리카지역에서 플랜트 사업수주 가능성은 인적네트워크의 기능 여하에 상당부분 좌우됨.

- 따라서 플랜트 수주 잠재력이 높은 공관에 담당관을 장기간 파견, 현지실정과 상황을 정확히 파악케 하여 플랜트사업 계획 초기부터 선점의 이점을 획득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또한 북아프리카지역은 국제금융기구 및 선진국의 개발자금 지원비중이 높은 지역이므로 원조성 차관프로젝트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입수도 중요함.

나. ODA를 통한 지원

- ODA 자체는 해외건설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입찰시 아프리카에서 양허성 금융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아프리카 건설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에 대한 ODA 규모를 일정부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아프리카 건설시장은 시공사 금융조달 요청 및 투자개발형 공사가 증대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과 공사발주의 연계성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유망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타당성조사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KOICA의 무상지원사업 중 해외건설과 관련하여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는 개발조사사업(Development Study)과 프로젝트사업을 들 수 있으나, 플랜트 사업의 규모를 감안할 때 직접적인 프로젝트 지원보다는 사업타당성조사(F/S)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발조사사업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개발조사사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후술함)
- 개발조사사업은 아프리카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종합개발계획(M/P), 사업타당성조사(F/S) 및 실시설계(Engineering Design) 등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술용역업체 및 건설업체의 아프리카 진출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현재 개발조사사업을 통한 해외건설 수주는 총 33건, 2,300만 달러이며,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리비아(알파타대학 개보수공사 감리용역), 이디오피아(참전용사마을 학교건립사업 건축자문용역) 등 모두 두 건에 불과함.

□ 개발조사사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건설엔지니어링업체들의 아프리카 진출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데, 특히, 타당성 조사와 시공과의 연계성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수익성 제고에 기여함.

-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의 수주형태를 보면, 대부분 주어진 설계에 의한 단순 입찰경쟁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프로젝트 발굴과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수주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음.

- 개발조사 사업을 우리 건설업계와 연결시켜 보면 다음과 같이 그 목적과 유형의 분류가 가능함.

<표-5> 해외건설부문의 개발조사사업의 유형

비교우위사업	전력, 정보통신, 신도시건설 등
해외진출 촉진	도로, 전력, 신도시건설 등
수출유발 효과촉진	정보통신 등
해외자원 확보	자원개발, 지질조사 등
글로벌 이슈에 부합	환경, 보건 등

□ 또한 경제협력과 공사발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공적개발원조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외경제개발협력기금(EDCF)의 지원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EDCF의 지역별 지원비중을 보면 65% 정도가 아시아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아프리카 비중은 6%대에 머물고 있음.

- EDCF를 통한 아프리카 건설공사 수주실적을 보면, 튀니지(1건, 1.4

억 달러), 가나(4건, 6,300만 달러)로 규모도 작고 소수 국가에 그치고 있음.

- EDCF 자금은 일종의 Seed Money로서 미개척시장에 대한 플랜트 수출 및 외국정부 발주공사의 사전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함.

다. 세일즈 건설외교

- 아프리카 시장개척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진출 여건조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지정부, 지역사회, 발주처 등과의 밀접한 유대 및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함.
- 따라서 국가적으로 건설외교 또는 양국간 경제협력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우리기업이 아프리카와 같은 미개척 틈새시장을 개척하는데 있어 유리한 입장에서 진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해 주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대형 플랜트 수주 시점에 맞추어 정부 고위인사 방문, EDCF 공여 계획 조절 등 마케팅 외교를 전개함으로써 우리기업들의 수주 가능성을 극대화함.
- 특히, 아프리카는 여타 개도국에 비해 정부관료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관련 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한 상대국과의 정기적인 교류채널 구축과 주요 발주처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우리기업의 공사수주를 위한 건설외교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 주요 프로젝트는 국영 공사에서 발주관리하고 있어 이들 관련 고위인사와의 교류확대가 필요함.
- 대다수 발주처는 직접 대면을 통한 상담을 중시하며 국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경우에 따라서는 군부 및 왕실의 영향력이 프로젝트의 성사를 좌우하고 있음.

- 건설외교의 최대 기대효과는 1)개별 민간기업이 접근하기 어려운 발주처 고위 인사 예방을 통한 인맥확보 2)발주처와의 건설협력 증진을 통해 초기 정보입수 및 프로젝트 참여기회의 확대임.

4. 아프리카 개발지원

가. 아프리카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 확대

① 아프리카 최빈국 현황

- 전 세계 49개 최빈국을 지역별로 보면 아프리카지역이 34개국, 아시아지역이 13개국, 중동 1개국, 그리고 중남미 1개국임.

<표-6> 아프리카 최빈국(34개국)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니제르, 레소토, 르완다,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산토메 프린시페, 세네갈, 소말리아, 수단, 시에라리온, 앙골라, 에리트리아, 이디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 지부티, 차드, 카보베르데, 코모로, 콩고민주공화국(자이레), 탄자니아, 토고

- 우리나라는 2004년에 34개 아프리카 최빈국에 38억 달러어치를 수출하였으며 이들 국가로부터 6억 달러어치를 수입하였음.
- 또한 교역규모는 44억 달러에 이르며 이들 국가들을 통해 3.2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음.
- 우리나라의 총 수출에서 아프리카 최빈국에 대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5% 내외로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00년 1월부터 최빈국에 대해 HS 6단위 기준으로 116개 WTO 권고품목 중 87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로 시장접근을 허용하는 특혜관세를 부여해 오고 있음.

- WTO에서 권고하고 있는 116개 품목 중에서 우리나라가 특혜관세를 공여하고 있지 않은 29개 품목은 농산물 13개 품목, 수산물 8개 품목, 임산물 1개 품목, 그리고 공산품이 7개 품목임.

<표-7> 아프리카 최빈국과의 교역현황

(단위: 억불)

	수출	수입	무역수지
아프리카 최빈국(34)	38.3	6.0	3.2
전세계	2,538	2,244	29.3
비중(%)	1.51	0.27	10.1

주: 2004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KOTIS)

② 특혜관세 확대의 필요성

- 최빈국에 대한 경제적 지원 논의는 이미 지난 1970년대부터 국제적인 이슈로 등장하였으나, 최빈국의 절대적인 빈곤은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아프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1990년대 말에는 유엔이나 WTO 등 국제기구들을 통해 최빈국의 절대빈곤을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1996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에서는 최빈국에 대한 직접적인 원조와 더불어 최빈국의 제품에 대해 수량제한 없이 무관세로 시장접근을 허용하자고 합의 한 바 있음.
- 그리고 각종 국제기구들은 2015년까지 최빈국의 절대빈곤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여러 계획들을 추진하게 되었음.
- 선진국들은 최빈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수량에 대한 제한 없이 무관세로 시장접근을 허용할 것으로 요구받고 있으며, 실제로 선진국들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일본은 2001년도부터 대부분의 섬유제품에 대해 무관세의 우대조치

를 시행하였으며, 미국 역시 2001년도부터는 이들 품목들에 대해 특혜관세를 공여하기 시작하였음.

- 캐나다는 2003년도부터 최빈국으로부터의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는 섬유 및 가죽제품에 대해 무관세의 우대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우리나라도 최빈국의 절대적 빈곤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참여해야 할 도덕적인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아프리카 최빈국의 대부분 국가들은 수출을 할 능력도 수출을 확대할 능력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혜관세를 보다 확대할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더욱이, 아프리카 최빈국의 경제규모나 우리가 교역을 통해서 얻는 무역수지 흑자를 고려한다면 이들 최빈국에 대해 특혜관세를 확대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할 것임.

나. ODA사업의 효율화

① ODA 규모의 확대

□ 아프리카에 대한 ODA 규모 증액은 개발원조 정책 시행의 선결 과제임.

- 최근 G8 선진국은 아프리카 14개 최빈국의 300억불에 달하는 부채를 탕감해주고, 아프리카 원조를 2010년까지 연간 500억불로 확대하기로 결정한바 있음.

- 아프리카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국제기구 내에서의 지원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양자차원의 대 아프리카 협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경제적 지원확대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제고라는 명분뿐만 아니라 원조 공여국의 경제적 실리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 그 동안 우리정부는 경제적 위상에 비해 아프리카지원에는 미온적인 입장을 취해 온 것이 사실이나 아프리카경제의 성장가능성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지원노력은 아프리카 경제진출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에서의 지지 획득 등 국제정치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정책은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고조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이 지역 국가들에 대한 개발사업에 참여하는데도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것임.
 - 선발개도국으로서의 우리의 개발경험을 전수하기 위한 전문가, 훈련생초청 및 자원봉사단 파견은 각국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바,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 ODA 확대는 당장은 재정적 부담으로 돌아오겠지만 아프리카가 새로운 성장지대로 인식되어 가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로 인한 기회는 결코 적지 않을 것임.
- 지원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국제기구의 지원요건을 수용하는 개혁의지, 국가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무상원조의 경우 빈곤완화, 질병퇴치 등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함께 수원국이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적자원 개발과 생산력 향상에 지원을 집중해야 함.

② IT(정보통신) 지원 집중

- 한국은 정보통신 강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새로운 빈부격차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에 집중함으로써 발전에 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점

차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부문은 아프리카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하부구조인 동시에 현재의 기술발달, 새로운 서비스 등장 등의 추세를 고려할 때 시급한 원조대상 분야로 인식되고 있음.

□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통신사업의 국제화 및 해외시장 확대 차원에서 향후 주력사업이 될 아프리카의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지원협력은 각별한 의미를 지님.

- 아프리카의 정보격차 완화사업의 발굴과 정보통신 발전지원을 통해 국내사업체의 현지진출 확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경제적 실리확보 및 IT 강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제고할 수 있음.

- 제한된 재원으로 정보통신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겠으나, 정보통신부문이 국가전략적인 차원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감안되어야 할 것임.

□ 정보통신부문에 대한 아프리카의 공적개발원조의 수요는 여타 다른 분야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대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그 시행자원이 제한적이라는 딜레마에 처해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자금 지원은 경제적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아프리카국가들을 중점대상국으로 하되, 이들 개별 국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구체적인 통신환경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우선적인 지원협력 방안으로는 전문가파견, 연수프로그램을 통한 IT 전문인력 초청교육, 정보화 교육 등 인적·기술적 지원과 나아가 컴퓨터 보급, 정보센터(telecenter), 정보통신망 등의 인프라 구축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③ 국별 원조전략 수립의 체계화

- 협력사업의 효과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수혜지역 및 국가에 대한 정보를 확보, 특성에 맞는 적절한 원조전략 수립이 관건임.
- 이를 위해서는 국별 특성, 개발우선분야, 인적자원 보유 현황, 사회 인프라 수준 등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역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협력사업에 대한 한국의 비교우위분야, 전략적 지원분야 선정 등을 위해 체계적인 원조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원조 효과를 제고시켜야 함.
-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원조를 받은 경험과 원조를 제공한 경험을 보유함으로써 국별 특성에 적절한 개발전략 수립하고 개발경험을 전수할 수 있는 비교우위가 있음.
- 지역전문가 양성을 통한 협력사업 추진능력 배양
- 개발협력 개선방안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프리카지역을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지역전문가를 양성해야 함.
- 지역전문가 혹은 전문 자문단을 통해 국별 원조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원조를 실시할 경우 원조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임.

④ 개발조사사업의 확대

- KOICA의 개발조사 사업은 자원 절약적이고 지식 집약적이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원사업으로, 아프리카에 대해 적합한 개발원조 형태라 할 수 있음.
- 또한 개발조사사업은 컨설턴트 분야에서 경쟁력이 부족하여 국제경쟁 입찰참여에 상당한 제약을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 컨설팅업계의

능력배양(Capacity)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분야임.

- 비록 그 실적은 저조하지만, 우리나라 건설엔지니어링업체들은 KOICA의 개발조사자금으로 프로젝트의 타당성조사 등 초기단계부터 참여하여 해외건설시장 개척과 해외건설 수주에 기여해 왔음.
- 개발조사사업은 그 성격상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타당성조사 등으로 끝나지 않고 본사업의 시행이라는 후속사업이 뒤따르게 되어 있어 유상차관 등의 협력수단과의 연계를 기할 수 있음.

□ 개발조사(Development Study)는 개도국의 경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개발사업 및 기획에 대해 조사단 또는 전문가를 파견하여 종합개발계획(Master Plan), 기초조사(Basic Study),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 기본 및 실시설계(Basic and Detailed Design)를 작성하는 등 각 분야에 대해 기술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 통상적으로 ①사업 발굴(Identification) → ②준비단계(Preparation or Formation) → ③심사(Appraisal) → ④실시(Implementation) → ⑤평가(Evaluation)의 5단계 프로젝트 사이클 중 ① ② 단계에 해당하는 사업임.

<표-8> 개발조사 사업의 기대효과

수원국	- 개발프로젝트의 타당성 여부판정 및 사업우선순위 제시 - 선진국이나 국제금융기구 등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필요한 자료제공 - 개발조사 과정에서 상대국 기술자와의 공동작업으로 개발조사에 관련된 기술 및 노하우 이전
공여국	- 수원국과의 경제 외교협력 증진 - 수원국 진출기회의 확대 · 관련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 관련사업 진출시 국내업체의 참여가능성 제고 · 국내 기자재 수출 및 전문인력의 활용 - 양질의 프로젝트 발굴 및 차관제공 결정에 유용한 자료제공(EDCF와의 연계) - 국내 용역기술수준의 해외진출에 따른 경험축적

- 아프리카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조사 사업협력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협력대상 국가는 경제협력 잠재력 및 정치, 외교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제공할 수 있는 분야와 아프리카국가들이 우리나라로부터 기대하는 분야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
- 개발계획상 우선순위가 뚜렷하지 않은 프로젝트에 집착할 경우 집행 단계에 들어가면 예측치 못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만큼 성공의 확률은 낮아지게 됨.
- 우리가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원조프로그램과 연관시킨다면 성공확률도 높고 개도국의 개발계획에 사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임.
- 대형자금의 개발조사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질적 공급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형프로젝트 사업에 치중할 필요가 있음.
-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개발조사 사업규모가 적고 제한적일 것임에 비추어 소수의 대형사업에 원조자금을 소진하느니 보다는 다수의 중·소형 사업을 될수록 많은 나라에 제공함이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임.

5. 협력포럼 구성

가. 협력포럼의 필요성

- 아프리카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아프리카지역과 양자 차원의 협력포럼을 만들 필요가 있음.
- 물론 아프리카 시장진출의 핵심 주체는 민간부문인 만큼 민간부문이 조직적으로 특정국이나 지역전체에 대한 이해관계를 협의 조정해 나

가는 노력이 필요함.

-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현재 민간기관으로서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곳이 없는 상황임. 명목상으로는 한-아프리카 협회가 있으나 유명무실하여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민간협력에 기대를 걸기는 너무도 막연함.
- 따라서 민간중심의 협의체가 활성화되기 이전 단계에서 과도기적인 조치로 민관합동협의체(‘한-아프리카 협력포럼’)를 창설,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 문제를 총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우리정부는 아시아-아프리카 협력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협력기회의 확대를 꾀할 필요가 있음.
- 금년(2005년) 4월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양 대륙간 정상회의(Asia-Africa Summit)가 89개국 정상급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어, 양 대륙간 정치적 연대와 경제 및 사회문화 협력을 새롭게 다짐한다는 내용의 ‘아시아·아프리카 신전략 파트너십(New Asia-Africa Strategic Partnership)’을 채택한 바 있음.
- 동 파트너십은 정부, 지역기구, 민간이라는 3중 협력체제 마련과 이를 바탕으로 두 대륙간 협력의 틀을 다져나가는 것으로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
- 특히 정부간 협력을 위해 각료회의와 정상회의 개최를 각각 2년과 4년으로 정례화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대한 우리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차기 정상회의는 남아공에서 개최기로 합의하였음)
- 우리정부는 “신전략 파트너십”에 기초한 협력프로세스에 적극 참여하고, 한국의 경제개발 모델과 발전경험을 아프리카국가들과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더 나아가, 우리기업들이 아프리카와 같은 미개척 틈새시장을 개척하는데 있어 이를 지원하고 필요한 여건조성을 위해서는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 등과 같은 경제기구와의 경제·통상외교와 협력정책을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함.

<표-9> 「아시아·아프리카 신전략 파트너십」의 주요 내용

주요목적	·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무대에서의 다자적 접근 및 아시아-아프리카간 실질적 협력증진 · 인적자원개발 및 지속가능한 개발투자 증진 · 인권·선정(good governance)·민주주의 달성을 위한 협의채널 마련 · 남-남 협력강화 및 개발을 위한 정보 및 경험 공유
추진원칙	· 1955년의 반둥원칙 · 역내 사회·경제체제 및 개발수준의 다양성 인식 · 상호존중 및 상호이익에 기반한 대화채널 · 비배타적인 협력증진 · 공동비전 및 동등한 동반자관계 신념에 기초한 실질적 협력 · 양 대륙 지역기구를 통한 지속가능한 파트너십 추구 · 민주적이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조화로운 사회건설 · 다자무대에서의 단일화된 노력
추진방법	· 정부·지역기구·민간부문간 3중 협력체제 마련 · 정부간 회의의 정례화(각료회의: 2년, 정상회의: 4년) · 지역기구간 경험(Best Practice) 공유 등 정례적 협력 · 민간협력 채널구축

나. 아시아 주요국의 협력포럼 개요

- 아시아 주요국들은 아프리카를 새로운 경제적 협력파트너로 인식하고 독자적인 협력프로그램을 통해 아프리카의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음.

- 아시아 주요국들과 아프리카의 관계강화는 기본적으로 아프리카가 새로운 기회의 시장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전략이 기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① 중국

- 전통적으로 아프리카국가들에 대해 정치경제 및 기술지원은 물론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강력한 유대관계를 형성해 오고 있는 중국은 2000년 10월 발족된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China-Africa Cooperation Forum)을 계기로 협력관계를 더욱 긴밀화하고 있음.

- 동 포럼은 양 지역간 협력체제를 새롭게 다지는 경제·사회발전 협력 프로그램으로 기본적으로 상호이해 증진, 경제협력 강화, 교육 및 과학기술 협력, 문화교류 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00년 10월 중국에서 1차 포럼이 개최되어 「베이징 선언문」을 채택하였음.
- 이어 2003년에는 양국의 외무·무역·산업 장관 등 각료급 인사와 100여명의 중국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에티오피아에서 2차 포럼이 개최되어 「베이징 선언문」의 후속작업으로 「Addis Ababa 행동계획」을 채택하였으며 3차 협력포럼이 오는 2006년 중국 베이징에서 다시 개최될 예정임.

② 일본: TICAD

- 일본은 1990년대 들어 아프리카를 재인식하고 TICAD(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라는 협력포럼을 통해 협력방안을 새롭게 모색해 오고 있음.
- 지난 1991년 유엔총회에서 일본정부의 제안에 의해 발족된 TICAD는 기존의 단순한 공적개발원조(ODA)의 확대보다는 아프리카 경제발전의 핵심요소인 바람직한 국가경영체제(good governance)와 인적자원의 개발을 지원하고, 통상확대와 민간투자를 촉진시킴으로써 아프리카경제의 글로벌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한다는 개발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모두 4차례의 포럼이 개최되었음.
- 그간의 동향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지난 1993년 10월에는 아프리카 48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제1차 TICAD 회의가 개최되어 「아프리카개발회의를 위한 도쿄 선언문」을 채택한데 이어 1998년 10월에는 제2

차 회의가 개최되어 「동경 행동계획」을 채택하였음.

- 그리고 2003년 10월 제3차 회의에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고이즈미 일본총리를 비롯한 아시아 14개국과 오바산조 나이지리아 대통령을 위시하여 아프리카 50개국 대표 등 총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회의가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어 무역 및 투자 협력증진을 통한 빈곤해소, 민간 및 공공부문의 협력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시아·아프리카 통상 및 투자증진을 위한 TICAD-NEPAD 공동정책」 선언문을 채택하였음¹⁾.
- 물론, 일본의 대 아프리카 협력강화 이면에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추구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이라는 정치적 계산이 내재해 있다고 볼 수 있음.
- 금년 4월 개최된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고이즈미 일본총리는 아프리카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도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음.
- 일본정부는 경제규모가 크거나 아프리카내에서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큰 국가들에 대해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음.
- 지난 2001년 1월 현직 수상으로는 처음으로 모리 수상이 공식 방문한 국가들 역시 남아공, 케냐, 나이지리아, 이집트 등으로 일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큰 아프리카 경제대국이었음.

③ 기타 아시아

-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 주요국들 역시 독자적인 협력프로그램을 통해 아프리카국가들과의 정치·경제·사회적 유대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자간 경제교류가

1) NEPAD(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는 아프리카의 빈곤퇴치를 위한 경제발전 종합 플랜으로 세계화 과정에서 아프리카가 변방화되는 것을 막아내고 정치, 경제적 연대강화와 해외자본 유치를 통해 아프리카국가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창출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탄력을 받고 있음.

- 특히, 아프리카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온 인도는 최근에는 자국의 고도성장에 따른 석유 및 원자재 수입선 확보와 해외 수출시장 확대의 필요성에 따라 “인도-NEPAD”라는 양자간 협력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유대관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고 있음.

IV. 요약 및 결론

- 아프리카는 과거와는 달리 새로운 발전의 가능성과 함께 잠재적 가치가 인정되면서 미개척 유망지대로 부상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물론, 시장규모가 영세하고 정치적 불안, 인종갈등 및 분쟁, 질병, 국가경제 전반의 낙후성 등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나, 여타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 심하고 한국에 대한 인식도 좋은 편이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진출여건이 그리 나쁘지 않은 미개척 시장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정부의 아프리카에 대한 시각교정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에 비례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아프리카와 관계가 성숙되지 않은 우리나라로서는 이질적인 아프리카 53개국에 대해 동등한 협력관계 구축을 기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음.
- 따라서 쌍무교섭 방식을 통한 경제협력은 우리나라의 이해관계 기준을 통해 선별하여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해 우리는 아프리카 경제협력의 거점국가를 선정하고, 주변국에 대한 보완적인 협력형태를 구축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은 첫째, 자원보고로서의 가치, 둘째, 수출시장으로서의 가치, 셋째, 거점지역으로의 활용 및 지역경제통합에서의 핵심역할 등이며, 이와 같은 논거에 기초하여 우리나라가 중요한 아프리카 거점전략국가로 삼아야 할 나라로는 <표>와 같이 손꼽을 수 있음.

<표-10> 분야별 협력방향

분야	협력추진 방향	주요 내용
통 상	한-남아공 FTA 추진 통상인프라 구축	- 아프리카 전략거점으로 활용 - 공동 정보망 구축 - 지역연구 및 시장조사 기능강화 - 제도적 투자인프라 구축 - 청년인력의 시장개척 지원확대 - 문화 및 인사교류
에너지자원	자원협력협정 자원협력위원회 자원외교	- 제도적 기반구축 - 나이지리아, 앙골라, 리비아, 알제리, 적도기니 등 산유국에 집중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 정보망 구축 ODA를 통한 지원 세일즈 건설외교	- 플랜트 전문가 파견 - 타당성 조사를 통한 EDCF와의 연계성 제고 - 현지정부와의 유대관계 강화
개발지원	최빈국 특혜관세 확대 ODA사업의 효율화	- ODA 규모의 확대 - IT 지원 집중 - 국별 원조전략 수립 - 개발조사사업 확대
협력포럼 창설	핵심국과의 대화채널 양자간 협력포럼	- 아시아 주요국들은 이미 독자적인 협력채널 구축

- 과거 냉전시대에 있어 우리의 아프리카 외교는 유엔에서의 지지 획득이 전부였으나, 오늘날 글로벌경제시대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협력방향은 경제적 이익과 개발협력 관계의 조화로운 발전임.

-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이 호혜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경제적 이해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아프리카국가들의 협력 입장을 반영하여, 자금협력 및 개발협력 등 원조부문이 추가된 새로운 협

력모델이 필요함.

- 특히, 협력의 원칙으로 양측간의 동질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개발도상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아프리카지역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됨.